

러북 군사협력 심화와 한반도
이홍섭(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팽창, 그 현재와 미래
백우열(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러북 군사협력 심화와 한반도



이홍섭(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 러·북 양국은 2024년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기반으로 북한의 병력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함으로써 동맹에 준하는 협력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
- 양국의 군사협력은 북한에 핵·미사일 능력 강화의 기회
- 한반도의 안정구축을 위해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공조를 통하여 러·북, 러·중 협력에 대비 필요

1. 러·북 군사협력의 배경

지난해 6월, 러시아와 북한은 동맹에 버금가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였다. 10월에는 소문만 무성하던 병력을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함으로써 양국 간 군사협력의 수준이 전례 없이 높아졌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양국은 굵직한 러브콜을 주고받으며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러시아의 쇼이구 안보회의 서기(전 국방장관),

7월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각각 북한을 방문하였다. 두 차례의 방문을 통해 양측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북·러 두 나라는 모든 전략적 문제에 대해 견해를 함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적 해결과 관련하여 러시아 지도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한다고 밝혀, 북·러

간 전략·전술적 공동보조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양국 간 군사협력의 배경에는 군사적 요인 외에도 전략적, 외교적, 경제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서방의 제재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서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과의 관계 확대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공조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일부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중립을 지킬 우군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무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게 대규모 재래식 무기와 포탄 생산 능력을 보유한 북한은 전쟁물자 조달과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파트너이다.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 미사일, 방공 체계 등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중국과 동맹에 가까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협력은 동북아에서의 다자주의를 구현하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넷째,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중국, 이란과 함께 '반미 전선'을 구축하고자 한다. 다섯째,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북 협력은 러·중 협력과 함께 북·중·러 안보 연대를 형성하여 역내 세력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러·북 군사협력은 일시적인 편의에 따른 동거라기보다는 철저한 전략적 계산에 기반한 협력으로 보인다. 즉 러시아는 단순한 전술적 이익을 넘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략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군수물자를 확보하며,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반미연대를 구축하려는 다층적인 목표를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기적인 군사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신질서 구축을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2. 러·북 군사협력의 전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한의 초기 대응은 수사적(修辭的) 지지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2022년 2월, 침공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외무성은 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을 지목했다. 3월 2일 열린 유엔 총회 긴급 특별 회의에서

북한은 러시아,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시리아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수사적 지지는 북한이 모스크바와 동맹을 맺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점차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러시아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전쟁을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곧이어 6월에는, 북한이 러시아, 시리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의 독립 및 주권을 공식 인정하였다. 2022년 8월,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고받은 서한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단순한 수사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두 정상은 이 서한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을 '적대 세력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지칭하며, 이에 대응해 '전략·전술적 협력, 지원 및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럽 연합과 미국의 제재 및 수출 통제에 더해 일본, 한국, 대만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러시아의 군수품 부족이 점차 심각해지자, 푸틴 대통령은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선택했다. 초기 러·북 협력은 현금과 무기를 맞바꾸는 거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할 122mm와 152mm 포탄을 북한이 대량으로 공급하는 대가로, 북한은 식량과 재정 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식량 및 재정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던 북한에 큰 도움이 되었다. 모스크바가 평양에 제공한 군사기술의 정확한 내용과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북한의 두 가지 장기 목표와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 위성 기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기술 등을 포함한 이러한 군사 기술 지원은 김정은이 애초 구상했던 재래식 무기와 비재래식 무기의 질과 양을 모두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이 유엔이나 미국 등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 전쟁 발발 이후에도 이러한 지원은 계속되었지만, 러시아와의 더욱 공고한

관계 발전은 북한에 명확한 전략적·이념적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그 결과 북한은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앞으로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더라도 공식적인 유엔 차원의 규탄은커녕 추가 제재조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은 두드러졌다. 양국 대표단 간 고위급 및 장관급 상호 방문의 빈도가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양국 관계 확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2023년 9월, 두 정상은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최고지도자에 취임한 이후 최장기간의 해외 순방에서, 북·러 관계를 두 '무적의 전우' 간의 '영원한 전략적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6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향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선언하였다.

3. 러북 군사협력의 의미

최근 러시아의 대외전략 기조는 매우 공세적이고 이념적이며 선동적이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결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비(非)서방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푸틴 정권은 서방의 최종목표가 러시아를 붕괴시키는 데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對)러 적대 정책을 부추기고 실행하는 당사국으로 미국을 지목하였다. 러시아는 세계가 미국과 유럽 중심이 아닌 '다극화된 세계'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이 기존 국제질서를 고집하면서 전 세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서방이 자신들의 패권에 저항하는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을 동원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영향 하에 두려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략 환경에서 러시아는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 인도, 이슬람권,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러시아가 2023년 3월 발표한 '대외정책개념'(Foreign Policy Concept)은 러시아의 국제관계 인식과 외교

전략의 주요 특징을 보여주는 문서로서, 현재 북·러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전략적 틀을 제공한다. 이 문서에 기반하여 러·북 관계를 조망하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거부하고, 다극적 권력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비서구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도 그 중 하나로 간주된다. 러시아는 북한을 '비(非)서구 문명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극 체제의 파트너'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북한을 과거처럼 일시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연대의 상대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는 2023년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새로운 수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재정의하였다. 또한 실리를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은 러시아가 UN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북한과 무기거래 및 기술 이전을 강행하는 정책적 근거가 되었다. 즉 군수물자(포탄, 미사일 등), 노동자 송출, 기술 교류 등은 양국의 실리적 필요에 따라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외정책개념'의 또 다른 특징은 국제 제재의 무력화와 새로운 국제질서 구상이다. 미국 중심의 제재 시스템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는 비서방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강조하며 국제 제재를 공동의 억압 도구로 간주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외정책개념'은 북·러 관계를 일시적인 협력이 아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제도화하는 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서는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외교적 우선순위가 낮아졌으며,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북·러 군사협력은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두 가지 핵심 국내 목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둘째, 핵 능력의 제고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를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내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대내적으로 국민 통제를 강화하며 정권의 생존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설령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 러시아가 북한의 포병 전력이나 미사일, 병력 지원을 덜 필요로 하게 되더라도, 평양은 모스크바와의 관계 회복을 활용하여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계속 강화하려 할 것이다.

현재 러·북 관계는 단순한 일시적인 편의적 동맹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구체적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양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2024.6)을 통해 군사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외교 등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조약 체결 당시 러시아 측 수행원 명단에는 외무부, 국방부, 천연자원부 장관 및 러시아 국영 우주개발공사(로스코스모스) 사장, 철도공사 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양국 관계가 단순한 형식적 외교협력 수준을 넘어 제도화된 전략 동맹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양국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필요성과 긴밀한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병력 및 포탄 부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고, 북한로서는 무기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동시에 첨단 군사기술을 획득하고 안보 차원의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예컨대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기술, 잠수함 설계 기술, 고정밀 무기 기술 등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셋째, 러·북협력은 미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반미동맹’적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성격을 띠며, 양국 모두 UN 제재 체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즉 양국은 국제질서 재편에 공동 대응한다는 전략적 배경 아래 협력을 전개해왔다. 북한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핵무기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중·러 3국에 큰 자극제가 된 듯하다. 이후 9월에는 북·러 정상회담이, 10월에는 러·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어, 한·미·일 안보협력에 상응하는 북·중·러 삼각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소련 해체 이후 30년 가까이 소원했던 러·북 관계가 다시 밀착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을 대미(對美) 전선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역시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과 식량, 에너지 자원을 지원받음으로써 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얻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양국 관계는 더욱 밀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은 러·북 간 군사협력, 특히 북한의 파병에

따른 양국 간 혈맹 수준의 관계 확대에 대하여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러·북 간 군사적 밀착이 미·중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이런 맥락에서 러·북 간 밀착이 북·중·러 3국 연대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러·북 간 협력, 특히 군사협력의 심화는 동북아 지역 안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의 군사 및 미사일 기술 이전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우리의 대응

최근 방북한 쇼이구 안보회의 서기와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 것에서 드러나듯, 러·북 협력관계는 북한의 파병을 계기로 한층 격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이 러시아와 이념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하여 김정은 정권은 다자간 및 일방적 제재를 회피하고 무력화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양국 정권에 책임을 묻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한 대가로 막대한 물자와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미사일 체계와 핵무기 능력의 자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의 현상 유지와 장기적인 생존력이 한층 강화된 듯 하다.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러·북 군사 관계가 밀착되는 상황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핵 균형’ 구축을 위한 한·미 간 전략적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한·미·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러·북, 및 러·중 간 군사적 연대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쿼드(Quad)와 오키우스(AUKUS) 같은 지역 안보 협의체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홍섭 교수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안보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러시아정치 및 대외 관계, 그리고 에너지안보에 관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러시아 권력 구조의 특징, 러시아의 안보전략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hongsublee100@gmail.com)

러북 군사협력 심화와 한반도
이홍섭(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팽창, 그 현재와 미래
백우열(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팽창, 그 현재와 미래



백우열(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2020년대 한국의 방위산업의 글로벌 확장은 글로벌 Top10 국가의 반열에 오르고자 했던 글로벌 한국(global Korea)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화룡점정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2020년대 들어 중동북부 유럽 국가들에게 최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하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민주주의의 무기고'이자 '죽음의 상인'이라는 양가적인 국가브랜드를 한국에 입히고 있다.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그리고 북미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한국은 '포괄적이며 기술적으로 앞선 방위산업 기반'을 갖췄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러한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팽창의 현재를 간략히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의 일부를 제시한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의 급증과 그 맥락

2020년대 한국의 방위산업의 글로벌 확장, 즉 전쟁산업(war industry)로 달리 불리는, 즉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들을 개념화, 설계, 생산, 공급, 유지, 관리, 폐기하는 방위산업의 글로벌 팽창은 글로벌 Top10 국가의 반열에 오르고자 했던 글로벌 한국(global Korea)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화룡점정이다. 동시에 한국의 방위산업은 중부, 동부, 북부 유럽 국가들에게

최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 공급하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민주주의의 무기고'이자 '죽음의 상인'이라는 양가적인 국가브랜드를 한국에 입히고 있다.¹⁾

한국 방위산업 수출의 폭발적 증가는 2020년대 들어 발생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1) Wooyeal Paik, "South Korea's Emergence as a Defense Industrial Powerhouse", Asie.Visions, IFRI 139 (2024.1)

5개국 정도에 육상무기체계인 자주포, 해상무기체계인 초계함, 호위함, 그리고 항공무기체계인 훈련기 등을 소량으로 10억 달러 정도씩 판매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중 후반 동남 지역들의 국가들에 더해 영국, 호주, 페루로 대상국이 확장되면서 중소 규모로 제한적 수출이 연간 3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어 2021년까지 유지되었다.²⁾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수출 대상국은 유럽의 폴란드를 중심으로 중부, 동부, 북부 유럽 국가들로 확대되어 육상, 항공 첨단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대형 계약 수주 및 판매 완료가 발생했다. 2022년 한국 방산수출은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로 급속히 증가했다.³⁾ 무기거래에 관한 최고 수준의 정확성을 인정받는 SIPRI 무기이전 데이터(SIPRI Arms Transfer Data)의 5년 간격 평균 수치로 보면 한국의 글로벌 수출 점유율은 2010-2014년 1.3%, 2015-2019년 1.3%, 그리고 2020-2024년 2.2%로 2025년 현재 글로벌 10위다.

2024년 약 100억 달러로 줄었으나 2024년 이후 인도 예정 물량 기준으로 글로벌 대형 무기체계 시장에서 한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 이어 글로벌 Top5 정도에 해당한다. 가장 고부가가치의 전투기에서 미국, 프랑스에 이어 3위, 자주포에서는 1,203대로 미국, 프랑스를 제치고 1위, 전차/화력지원차량에서도 1위, 장갑차/차량에서는 미국, 독일에 이어 3위, 지대공미사일에서도 러시아, 미국, 독일, 이스라엘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⁴⁾ 이를 기준으로 2020년대 후반 한국은 대략 연평균 200억 달러 수출 달성이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수출 점유율이 약 3.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목표로 삼은 글로벌 탑4에는 미치지 못해도 영국, 스페인, 이스라엘 등을 추월하며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에 이어 6-7위 정도로 순위가 상승할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 무기 시장은 2025년 약 4,900억 달러에서 2030년 5,800-6,000억 달러로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30년대에는 연평균 230-250억 달러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100% 미국 원조에 의존하였지만 2020년대 중반 자체 무기체계를 대부분 생산하고 첨단 무기체계 이전을 대량으로 행하는 글로벌탑10 수출국이 되었다. 한국은 그동안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거의 유일한 개발도상국임을 국가 브랜드로 사용해왔지만 이제 무기체계 수원/수입국에서 공여/수출국으로 전환한 매우 드문 사례라는 브랜드도 추가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역량과 군사역량이 공히 중견선진국 그룹의 수준에 이른, 소위 '강대국의 최소(least of great power)'를 달성했다는 의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사력은 한 국가의 생존과 팽창의 가장 근본적인 역량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강한 군사력 없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균형 외교(hedging diplomacy) 전략 중심의 소국도 있지만 스위스, 싱가포르 등의 강소국들은 대부분 그 크기에 비해 비대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거나 강력한 미국과 같은 군사적 후견국가(patron)와 동맹을 맺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국익 추구를 위한 하드파워적인 군사적 압박과 위협에 맞대응하고 더 나아가 자국과 동맹 또는 연대하고 있는 국가들의 안보를 보조해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군사 역량은 강대국의 필수 요건이다.

강대국의 군사역량은 그 근간이 되는 무기체계들을 개발, 생산, 실전배치할 수 있는 방위산업 역량이 핵심이다. 한국이 전쟁산업 영역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군사 초강대국 다음 그룹에 진입한 것은 국제정치사와 군사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아웃라이어(outlier)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수준

영국의 싱크탱크인 IISS(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2025년 '무기생산국의 이상적 유형 모델 (An ideal-type model of arms producers)'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1B 등급(Tier 1B)으로 분류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등급은 '포괄적이며 기술적으로 앞선 방위산업

2)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https://www.sipri.org/databases/armstransf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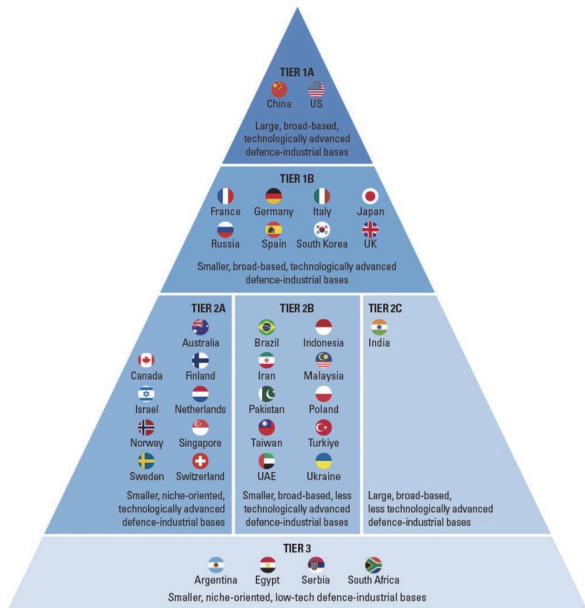
3) Wooyeal Paik. "The Korean Defense Industry Enters the European Security Theater: An Analysis of Korea-Poland Arms Deals" IRSEM (Ecole Militaire) Research Paper 140 (2024.2)

4) Matthew George et al.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4", SIPRI Fact Sheet (March 2025) p.4.

기반(broad-based technologically advanced defense industrial bases)'을 의미하는데 이 중 1A는 이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가로 미국과 중국이며 1B는 그보다 작은 기반을 가진 국가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영국 그리고 한국이 해당한다.

[그림] 무기생산국의 이상적 유형 모델⁵⁾

An ideal-type model of arms producers



Note: The tiers are illustrative and based on analytical ideal-type models. They are neither empirically exclusive or static. Producers have moved across tiers for various reasons over the past decade since the model was developed. Source: IISS, Richard Bitzinger, 'New Ways of Thinking About the Global Arms Industry' (ASPI, 2015)



1B등급 국가들이 2등급 국가인 이스라엘,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등과 구분되는 특성은 후자가 '포괄적'이 아닌 제한된 '틈새 지향적(niche-oriented)', 즉 몇몇 특정 무기체계들에 특화해 생산한다는 점이다. 이 유형 모델이 처음 제시된 2015년에 한국은 2B인 '그보다 작은 기술적으로 덜 앞선(Smaller, broad-based, less technologically advanced defense industrial bases)' 무기생산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⁶⁾ 1A와 1B로 분류된 모든 국가에 비해 무기체계 개발 기술력, 즉 새로운 혁신(innovation)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설계, 체계개발 역량에서 상당한 격차를

5) Evan A. Lakasmana et al. "Special Topic: Concerted Autonomy: Defence-industrial Partnership in the Asia-Pacific" (Chapter1), in IISS Asia-Pacific Regional Security Assessment 2025 (London: IISS, 28 May 2025), 19.
6) Richard A. Bitzinger. "New Ways of Thinking about the Global Arms Industry: Dealing with 'Limited Autarky' ASPI Strategic Insights 98 (November 2015).

명확히 보여준 한국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기술적으로도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한국의 최첨단 제조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이 방위산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방위산업, 즉, 전쟁산업의 역량은 포괄적이며 기술적으로 첨단화 된 무기체계를 보면 좀더 명확해진다. 한국의 전쟁산업은 육상, 해상, 해저, 항공, 전기전자 영역에서 현존하는 거의 모든 기초, 첨단 무기체계들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량 생산, 유지보수, 그리고 개량, 차세대 개발이 가능하다. 매우 포괄적, 통합적이다.

한국 방위산업의 가까운 미래

한국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기대는 글로벌 Top4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장밋빛 미래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조용한 경고음도 존재한다. 2020년대 중반 한국의 주력 제조산업들이 좀처럼 혁신 성장을 하지 못하며 국가사회구조, 정치체제, 국방군사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측면에서도 한국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소위 '피크코리아(peak Korea)'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방위산업 기업들은 주식시장의 총아로 떠올라 거품 논란이 일 정도로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 언론이 방산 수출 확대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연간 200억~3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이룬다면 국가 수출의 또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방산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견제, 그리고 튀르키예와 같은 신흥 경쟁국의 도전이 거세지면서, 주력인 육상 무기체계 분야에서 확장의 한계가 뚜렷하다. 지속적인 계약 수주는 이어지겠지만 이미 이 영역에서 판매 가능한 시장은 상당 부분 포화 상태에 이르러 폴란드 계약과 같은 대규모 계약 추가 수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방산 수출의 미래 확장은 공군 및 해군 무기체계 분야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군 무기체계, 즉 전투기·항공기·미사일 분야는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최상위 무기 수출국들의

전체 무기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다. 이에 따라 한국 방산의 돌파구는 항공 분야 및 해당 무기체계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 진입한 T-50훈련기와 FA50경공격기에 이어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수출을 서둘러야 한다. 육상무기체계에서 핵심첨단기술의 국산화의 중요성을 체감했듯이 항공 무기체계의 핵심 기술인 전투기 추력급의 가스터빈엔진 기술의 국산화가 이 영역의 수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또한, 5세대 및 5.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개발 계획을 2030년대에 현실화시켜야 한다.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각종 미사일 영역도 확장성이 매우 크다.

해상 무기체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강력한 산업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작년 호주 호위함 사업 수주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캐나다 잠수함 사업 및 유사한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수상함, 잠수함 사업 경쟁 입찰에서 대규모 계약 수주가 필요하다. 가장 큰 잠재 시장인 미국에서도 현재 수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지보수, 수리, 정비(Maintenance, Repair, Overhaul, MRO) 사업을 넘어 실제 수상함 및 잠수함 건조를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다른 육상 및 항공 무기체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무기거래는 '정부 대 정부(government to government, G2G)'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고부가가치 해군 영역의 무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해당 기업들 간의 협력, 그리고 그 경쟁 기업들 간의 타협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소위 '원팀 코리아(One Team Korea)'라는 구호가 유효한 영역이다.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핵심 영역인 국방인공지능(Defense AI)은 2025년 출범한 신정부의 'All-In-AI' 전략 추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신정부는 향후 5년 간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강력한 산업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 핵심은 민간과 국방 영역을 아우르는 '주권적 인공지능(Sovereign AI)'을 개발, 보유, 확장하며 AI 글로벌 보편화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다른 민간 산업 영역과

더불어 방위산업 전반에서 국방인공지능 역량을 급성장시켜야 하는 큰 도전이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에 부여되었다.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MUM-T)를 적용한 첨단 무기체계들의 독자 개발이 그 핵심이다. 기존 방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의 안두릴(Anduril)과 팔란티어(Palantir), 그리고 독일의 헬싱(Helsing)과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게끔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는 강대국 중심 글로벌 시장에서 반짝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백우열은 혁신 과학 시대의 정치적 新舊 난제에 천착하는 융복합정치학자다. 연세대학교,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미국 UCLA에서 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사상을 공부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부원장, 항공우주연구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프랑스 Institut de recherche stratégique de l'École militaire (IRSEM) 방문연구원, 벨기에 Vrije Universiteit Brussel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학술적-정책적 연구 분야는 글로벌 전략과 국내-국제정치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글로벌 안보 컨버전스다. 특히 현재 유럽대서양-인도태평양 지역 및 핵심 안보 영역(군사, 정치, 경제, 과학기술)의 컨버전스, 그 맥락에서의 NATO-IP4-한국 관계, 글로벌방위산업의 정치, AI 정치와 정책 등이 핵심 연구대상이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국방부 및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